

팔던 외국인, 다시 한국 채권 담았다… 장기 투자 수요 여전

이달 16일까지 1조4113억 순매수
환헤지 비용 상승에 매도 확대
전문가들, 일시적 조정으로 평가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장외채권시장에서 8·9월 순매도한 뒤 이달 들어 순매수로 돌아섰다. 국내 금리가 높아져도 환위험 관리와 자금 조달 비용을 고려한 투자 수익성이 낮아지면 외국인의 매수는 줄어들 수 있다. 앞선 순매도는 일시적인 조정이며 장기 투자 수요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금융투자협회 종합통계서비스 자료를 집계한 결과, 외국인은 이달 16일까지 장외채권을 거래대금 기준 1조4113억 원 순매수했다. 국채 7604억원, 은행채 3393억원, 통안증권 2431억원 등을 순매수했다.

외국인은 지난 7월 1조8118억원 순매수에서 8월 8885억원, 9월 1조1581억원 순매도로 전환했다. 9월에는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안증권을 9786억원, 국채를 2483억원 순매도했다. 전체 매도액은 전



여의도 금융가와 한강을 배경으로 외국인의 국내 채권 투자를 상징화한 모습. /AI 생성 이미지

월보다 줄었지만 매수액이 더 크게 감소하면서 순매도가 확대됐다.

이달에도 12일까지는 9844억원 순매도했으나 13·14일 이틀간 1조4208억원을 순매수했다. 이 중 국채 순매수가 1조2714억원으로, 이달 누적 매매를 순매수로 바꾸는 데 주된 역할을 했다. 이후에도 15일 6552억원, 16일 3197억원을 순매수하며 매수 우위를 이어갔다.

국고채 금리는 여름 이후 상승했다가

최근 낮아졌다. 16일 장 마감 기준 3년물과 10년물 최종호가수익률은 각각 연 3.854%, 4.182%로 9월 말보다 15.7bp, 22.5bp 하락했다. 다만 6월 말보다는 각각 15.1bp, 9.1bp 높은 수준이다. 1bp는 0.01%포인트다.

높은 금리가 외국인에게 곧바로 매수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환율 변동 위험을 줄이는 비용까지 감안하면 실제로 얻을 수 있는 수

익은 달라진다.

금투협은 9월 초 통화스와프(CRS) 금리 상승으로 외국인의 재정거래 유인이 약해지면서 단기물 매도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월 후반에는 거래 여건이 일부 개선됐고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관련 중기물 매수세가 유지됐다고 분석했다. 재정거래 유인은 자금 조달과 환위험 관리 등을 거쳐 국내 채권에 투자할 때 얻는 수익상의 이점을 뜻한다.

채권 분석 전문가인 윤여삼 메리츠증권 투자전략팀장은 국내외 금리차와 스왑레이트 변화가 이 같은 투자 이점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환헤지를 바탕으로 투자하던 영국 등 유럽계 자금의 유출도 확인됐다는 분석이다.

만기가 돌아온 채권의 채투자 부진도 보유잔고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9월 말 외국인의 국내 채권 보유잔액은 336조 9000억원으로 전월 말보다 7조8000억원 줄었다. 윤 팀장은 외국인 보유 비중이 높았던 국채 약 16조원의 만기도래 과정에서 글로벌 채권 투자심리가 위축돼 채투자자가 원활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만기

상황은 시장에서 채권을 파는 순매도와 별개로 보유잔고를 줄이는 요인 중 하나다.

통안증권 매수 재개에 대해서는 수주간 매도로 금리 수준이 조정된 뒤 신규 발행물의 일정 물량을 확보하려는 수요가 반영된 것으로 봤다. 채권 종류별 매매 차이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았다.

윤 팀장은 앞선 외국인 매도를 “일시적 조정”으로 평가하며 “일본계와 노르웨이 국부펀드 등 장기 투자주체의 자금 유입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

향후에는 한국의 재정여력과 국제 공급이 투자 매력을 뒷받침할 것으로 내다봤다. 세수가 늘고 국고채 발행량이 조절되면 재정 우려가 큰 일부 선진국보다 한국 국채의 상대적인 매력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통화정책에서 추가 악재가 생기지 않는다면 우호적인 공급이 해외 금리 변동의 영향을 줄이고 국내 금리의 고점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코인 대여 연 18% 수수료… 주식보다 비싸

금융당국 가이드라인 상한 20%
해외 코인거래소도 국내보다 낮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대부분이 코인 대여 수수료로 연 18%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을 빌려 파는 증권사 신용대주나 해외 거래소의 코인 대여 금리보다 높은 수준이다.

18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대여 서비스를 운영하는 4개 거래소의 연환산 수수료는 디지털엑스(옛 코빗) 18.72%, 빗썸·코인원 18.25%, 업비트 18.20%였다. 하루 0.05% 안팎의 이용료를 1년으로 환산한 수치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9월 시행한 가이드라인은 수수료 상한을 연 20%로 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코인원은 지난 8월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이용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다.

코인 대여는 원화나 코인을 담보로 맡기고 코인을 빌리는 서비스다. 빌린 코인을 팔았다가 가격이 내려면 다시 사서 갚는 방식으로 쓰인다. 주식의 신용대주와 구조가 비슷하다.

증권사 신용대주 이자율은 키움증권이 연 2.5~4.0%, 대신증권이 연 6%다. 대주를 기한 내 갚지 못했을 때 적용하는 연체



국내 주요 거래소 코인 대여 수수료는 연 18%대로 증권사 신용대주(연 2.5~6%)와 해외 거래소(바이낸스 비트코인 연 0.43%)보다 높다. /따능AI로 생성한 이미지

이자율 상한은 미래에셋증권 연 9.9%, 한국투자증권 연 9.95%다.

금액으로 따지면 차이가 더 분명하다. 1000만원어치를 30일 빌린다고 하면 하루 0.05%를 받는 거래소에서는 수수료로 약 15만원을 낸다. 같은 금액의 주식을 빌리면 이자는 대신증권 약 4만9000원, 키움증권 약 2만~3만3000원이다.

해외 거래소의 코인 대여 금리도 국내보다 낮다. 가상자산 데이터 업체 코인글래스에 따르면 18일 오후 기준 바이낸스에서 일반 회원이 코인을 빌릴 때 연 이자율은 비트코인 0.43%, 이더리움 1.98%,

테더(USDT) 4.71%였다. 해외 거래소 금리는 코인별 대여 수요에 따라 수시로 바뀐다. 국내 거래소는 코인 종류와 관계없이 비슷한 수수료를 받는다. 바이낸스는 국내에 신고되지 않은 사업자로 국내 투자자는 이용할 수 없다.

비교 대상 사이에는 조건 차이도 있다. 국내 거래소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기 자산으로만 코인을 빌려줄 수 있다. 주식대주는 코스피200·코스닥150종목 가운데 증권사가 정한 종목만 가능하고, 대여 기간도 코인은 최대 30일, 주식은 90일로 다르다.

/김아영 기자 aykim@

한국팀, AI 투자자보호 국제대회 수상

금감원·삼성전자 등 전문가들 뭉쳐
AI 기반 투자사기 예방 게임 개발

한국팀이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가짜 투자정보를 검증하도록 돕는 보드게임을 개발해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경진대회에서 수상했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국의 ‘트러스트 앤드 베리파이(Trust & Verify)’팀은 IOSCO가 주최한 글로벌 투자자보

호 AI 프로그램 개발 경진대회 ‘테크스프린트 2026’ 본선에서 지난 8월 ‘투자자 행동 영향’상을 받았다.

수상팀은 금감원 제재심의국 이은솔 선임조사역, 현대무팩스 김태원 대리, 삼성전자 김효원 대리 등 금융투자자 보호 및 AI 개발 전문가 3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AI가 생성한 가짜 투자정보에 대해 투자자가 스스로 검증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유도하는 AI 기반 보드게임을

선보였다. AI를 활용한 투자사기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개인투자자의 행동 변화를 효과적으로 이끌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대회에는 각국 민간과 금융감독기관 등 총 65개 팀이 지원했다. 이 가운데 14개 팀이 본선에 진출했으며 한국팀을 포함한 5개 팀이 수상했다.

금감원은 수상작을 향후 체험형 교육·홍보 행사 등에 활용해 AI 기반 투자사기에 대한 투자자의 인식을 높이고 건전한 AI 활용 능력을 키울 계획이다.

/허정윤 기자

무사고 건강보험료 할인, 비대면 신청 가능

금감원 Q&A

무사고 전환 절차 간소화

건강보험에 가입한 뒤 입원이나 수술을 받지 않았다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일정 기간 보험금을 청구할 만한 사고가 없었다면 기존 보장을 유지하면서 보험료를 낮출 수 있지만, 상당수 가입자는 이런 제도가 있다는 사실조차 몰라 혜택을 놓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복잡한 신청 절차 없이 전환 의사만 밝히면 보험회사가 가장 유리한 할인 조건을 찾아 적용해 줍니다.

금융감독원은 16일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사고 계약 전환 제도’의 안내와 신청 절차를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무사고 계약전환 제도는 건강보험 가입 이후 일정 기간 입원이나 수술, 중증 질병 진단 등이 없는 계약자에게 기존 보장을 유지하면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다수 보험회사가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 혜택을 받는 가입자는 많지 않습니다.

올해 5월 말 기준 무사고 전환제도가 적용되는 보험계약은 총 1081만건입니다. 이 가운데 계약 체결 후 1년 이상 지난 657만건 중 실제 보험료 할인을 받은 계약은 116만건으로 17.6%에 그쳤습니다. 금감원은 실제 무사고 할인 대상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험회사는 연 1회 계약응당일 이전에만 할인 가능 여부를 안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계약응당일은 보험계약 체결일에 대응하는 매년 같은 날짜를 뜻합니다. 정작 할인 신청이 가능한 시점에는 별도 안내가 없어 가입자가 혜택을 놓치기 쉬웠습니다.

앞으로는 계약응당일 이후에도 할인 가능 여부를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신청과 전환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 추가

안내하도록 개선됩니다. 알림톡뿐 아니라 전화와 우편 등 여러 수단을 활용해 안내받지 못하는 가입자도 줄일 계획입니다.

안내문 내용도 달라집니다. 기존에는 보험료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해 광고나 스팸 문자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안내문 제목과 첫 문장에 보험료 할인 안내라는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고, 전환 전후의 계약 유형과 보험료를 비교해 보여주도록 했습니다.

신청 절차도 간단해집니다. 일부 보험회사는 모바일로 할인 가능 여부를 안내하면서도 실제 신청은 지점 방문이나 보험설계사를 통해서만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알림톡이나 전화 등 비대면 방식으로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전화로 안내받았다면 별도 방문 없이 통화 중 전환 의사를 밝히는 것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할인 유형도 가입자가 직접 선택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기존에는 복잡한 전환 유형을 이해하지 못해 실제 무사고 기간보다 낮은 할인율을 적용받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가입자가 전환 의사를 밝히면 보험회사가 사고 이력을 확인하고 필요한 고지사항을 확인한 뒤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전환하도록 개선됩니다.

다만 모든 건강보험 가입자가 자동으로 할인받는 것은 아닙니다. 무사고 계약 전환 제도가 적용되는 상품인지, 입원·수술·중증질병 진단 이력 등 전환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금감원은 이번 개선으로 가입자가 제도를 몰라 보험료 할인 혜택을 놓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보험회사에 무사고 계약전환 대상 여부를 문의하고, 할인 가능한 계약이라면 전환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허정윤 기자 zelkova@